

## 이라크 전쟁과 민사작전 교훈

### I. 서론

21세기 미군 지상군이 투입되는 첫 전쟁은 이라크에서 벌어졌다. 2003년 3월20일 이라크 현지시간 오전 5시쯤 미국은 바그다드의 사담 후세인 거처로 의심받는 지하 시설물에 토마호크 미사일 공격과 F-117 스텔스 전폭기에 의한 GBU-28, 벙커버스터 공격을 퍼부음으로써 ‘이라크 자유작전’ (Operation Iraq Freedom)이 시작되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 6시15분, 연설을 통해 “미군과 연합군은 사담 후세인의 전쟁 수행 능력을 무력화해 이라크 국민을 해방하고 세계를 심각한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이라크 주요 군사 시설에 공습을 시작했다”고 전쟁의 표면적인 목표를 천명했다.

냉전종식 이후 신세계 질서를 구축하려던 미국은 2001년 9·11테러 사태로 무려 3000여명이 사망하는 수모를 당하자 응징보복전쟁과 대테러전쟁의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여



상임연구원 **박현옥**  
북한문제연구소

테러조직 알 카에다를 와해시키고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켰다. 2002년에는 북한,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분류하고 '힘의 정치'(power politics)를 통해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방지를 골자로 하는 부시 독트린(Bush Doctrine)을 추구해 왔으며, 이라크 전쟁 조기 종전으로 한반도 안보환경에도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

미군을 주축으로 한 영국, 호주, 폴란드 연합군은 전격전을 개시하여 D+21일인 4월 9일에는 수도 바그다드를 함락하고 후세인의 동상을 쓰러뜨림으로써 24년 독재정권을 붕괴시켰다. D+27일인 15일에는 승리를 선언함으로써 이라크 자유화 전투가 종료되었다. 5월1일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전에서 임무를 마치고 귀환 중이던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에서 개전 43일 만에 이라크전의 주요 작전 종료를 선언했다.

이라크 전쟁이 장차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특히 민사작전 차원에서 어떤 교훈을 남겼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군사작전 지원을 위한 민사작전 계획뿐만 아니라, 정부의 '응전자유화정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의 대테러 전쟁은 지속될 것이고 이라크 다음은 북한의 핵위협 제거에 총력을 경주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여기에는 이라크 전쟁과 비슷한 절차와 방법이 동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라크 전쟁의 원인과

목표를 살펴보고 전쟁수행상의 특징을 분석하여 민사작전 분야별 교훈을 도출함으로써 한국군의 민사정책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II. 이라크 전쟁의 원인과 목표

### ■ 전쟁의 원인

전쟁은 국가이익이 상충되는 현상에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채택되는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원인이 있게 마련이다. 이라크 전쟁의 원인은 민족과 종교갈등, 문화의 충돌 등 먼 곳에서 찾을 수도 있고 12년 전 걸프전쟁과 9·11테러 사태 그리고 유엔의 이라크 무기사찰 요구 등 가까운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 또한 중동평화, 석유확보, 유엔 및 국제질서의 개편 시도 등 보이지 않은 원인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내세운 이라크 공격의 논리는 미국에 대한 '위협제거'이다. 즉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그 무기를 테러집단에 넘길 수 있으며, 테러집단은 다시 9·11사태와 같은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미 이라크는 90년대 초부터 유엔 결의를 계속 위반하면서 안보 위협을 고조시켰기 때문에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가와 '악의 축'으로 분류된 상태이며, 지난해 9월20일 의회에 제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후 50

여년 동안 안보정책의 근간이었던 ‘억제전략’ (deterrent strategy) 대신 ‘선제공격’ (preemptive strike) 정책을 공식화하기에 까지 이르렀다.

미국이 주장한 이라크 전쟁의 국제법상 근거는 대체로 3가지인데, 첫째는 ‘인도적 무력간섭’ (Humanitarian Arms Intervention)이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3월15일 연설에서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과거 쿠르드족을 독가스로 대량 살상한 사실을 유독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비난의 차원을 넘어 국제법상 ‘개전의 근거’로 인정받기 시작한 인도적 무력 간섭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다.

코소보 전쟁도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세르비아의 인종청소에 맞서 유엔 결의 없이 군사행동에 나선 것이다. 인종청소는 ‘너무나 명확한 비인도적 행위’였기 때문에 국제법 학자들 사이에서도 큰 이견이 없었다.

둘째, 유엔 헌장 51조에 규정된 ‘정당방위’ (legitimate self-defense) 조항이다. 이 조항에는 ‘무력공격을 당했을 때’로 되어 있지만 예방적 차원의 선제공격까지 정당방위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부시 행정부의 주장이다. 즉 무기체계가 갈수록 발달하고, 공격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적이 국경을 넘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이미 방어의 시기를 놓친다는 논리다.

셋째, 미국은 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에

대한 무력 사용을 승인한 유엔 결의 678호와 이라크의 무장해제를 휴전 조건으로 규정한 687호를 들고 있다. 지난해 말 채택된 유엔 결의 1441호로 기존 이라크 관련 결의안의 지속성과 효력이 사실상 중단됐다는 견해도 없지 않지만 ‘이라크가 휴전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의 678호에 의거, 여전히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즉 1991년 4월에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안 제687호에서 ‘이라크는 국제적인 감독 아래 대량살상무기와 사거리 150km 이상인 탄도미사일, 관련 생산시설 및 장비를 파괴·제거 또는 무해하게 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 ■ 전략목표

모든 전쟁은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 추구해야 할 전략목표가 있기 마련이다. 이 전략목표는 신중히 설정되고 구체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전쟁이론가 클라우제비츠는 “가장 우수한 전쟁 계획은 목표를 단순화해 그것을 얻기 위해 힘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했다. 적과 나의 무게중심 (center of gravity)을 단순하고도 정확하게 파악해 “나의 무게중심을 지키고 적의 무게중심을 격파하는 것이 전쟁 승리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걸프전쟁의 목표를 쿠웨이트 원상회복에 두었고, 코소보 전쟁은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유고 대통령을 전범재판소에 세우는 데 두었으며, 아프간 전쟁은 9·11테러 응징 차원에서 탈레반 정권 붕괴에 목표를 두었다.

그렇다면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은 후세인의 전략·전술적 무게중심을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었을까?

물론 사담 후세인으로서의 생존(survival)을 전략목표로 하여 바그다드를 끝까지 지키는 생존이 가능하고 군사적 승리는 못하더라도 정치적 승리를 선언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 목표 달성을 위한 무게중심은 첫째,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고 둘째, 테러정권을 자유민주주의적인 정권으로 교체(regime change)하며 셋째, 중동평화와 세계안전을 위협하는 대량파괴무기(WMD) 개발을 억제하고 무장을 해제하는 데 두었다고 하겠다. 이렇게 보면 첫 번째 목표인 사담 후세인은 확실히 제거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두 번째 목표인 민주정부로의 정권교체는 연합군의 점령통치로 진행 중이며, 대량파괴무기 색출과 무장해제는 아직도 미해결 과제라고 하겠다. 그러나 유엔은 미·영 연합국에 합법적인 이라크 통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전쟁의 목표는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 Ⅲ. 이라크 전쟁의 특징

#### ■ 군인피해가 적은 전쟁

카타르 도하의 미 중부군사령부와 미 국방부, 영국 국방부 등의 자료를 토대로 4월 15일 현재의 전황을 종합해 보면 이번 전쟁은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과 전투 효율성(combat-effectiveness)을 높인 경제적인 전쟁으로 기록될 만하다고 하겠다.

이라크전에 동원된 연합군측 병력은 미군 25만 5000명, 영국군 4만 5000명, 호주군 2000명, 폴란드군 200명 등 30여만 명에 불과하고 이중에서 약 14만 명이 이라크에 진입했다. 이라크 군은 6만~7만 명으로 추산되는 공화국 수비대를 포함해 약 40만 명의 정규군이 있었고 다른 나라 지원병은 약 6000명으로 알려졌다.

전쟁비용은 총 800억 달러로 추산되나 이중에서 군사 및 정보에 624억 달러(78%), 이라크전에 협조한 파키스탄과 필리핀 등에 대한 원조에 78억 5000만 달러, 미국 내에 약 83억 달러가 사용될 전망이다. 걸프전쟁 761억 달러, 코소보전쟁 30억 달러, 아프간 전쟁 8억 달러에 비하면 이미 사용된 253억 달러의 전쟁비용은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한편 연합군의 전투·폭격기 출격 횟수는 약 3만회에 이르고 폭탄 2만발 이상이 투하됐으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약 750기가 발사됐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상자 및 포로 통계는 미군 105명이 적군과 아군의 사격으로 사망하고 18명이 개전 이후 사고로 죽었으며, 4명은 실종된 상태다. 영국군은 31명이 숨졌는데, 이중 8명이 전사했고 23명은 오인사격과 사고로 희생됐다. 미군 부상자는 495명이며 56명이 다른 사고로 부상했다. 한편 미군에 따르면 14일까지 바그다드와 주변 지역의 이라크군 사망자는 2320명이다. 또한 전쟁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약 30만명의 이라크인 난민이 피란갔다가 3000여명을 제외하고는 다시 돌아왔다. 미군은 최소한 7300명, 영국군은 6500명의 이라크 군을 포로로 잡았으나 대부분 석방했다.

■ 선제공격

그 동안 미국은 응징보복 전쟁을 주로 했으나 이라크 전쟁에서는 선제공격을 감행했다. 따라서 미국은 유엔결의 없이도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전례를 만들었다. 그 명분은 유엔헌장 제51조 자위권 조항 외에도,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잠재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게 하는 미군의 신방어전략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미 국방정보본부(DIA)가 2002년 발간한 ‘미 국방 연례보고서’에는 ‘그 동안 미 본토가 테러 등 비대칭적 위협에 대해 취약하다는 점을 경시했다’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어뿐만 아니라 선제공격도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으며 ‘최선의

방어는 효과적인 선제공격’이라는 전략개념을 구체화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소형 핵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핵태세 보고서’ (NPR)와 연관되는 것이다.

이번 전쟁은 미국이 지난 수년간 검토해 온 군사전략 개념의 전환, 즉 ‘예방적 공격’과 ‘선제공격’을 처음으로 실행에 옮겼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향후 국제분쟁 개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즉 대량살상무기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고 테러단체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공격을 단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우환거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도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4월29일 카타르에 있는 중부군사령부를 방문하고 ‘선제공격의 시대 진입’을 선언한 바 있다.

■ 속도전과 속전속결

미국의 이라크전쟁 핵심 전략은 속전속결이다. 3000여발의 크루즈 미사일과 대량의 공중폭격으로 이라크의 대공망과 지휘통신 체계를 마비시키고 후세인과 연락이 끊긴 일선 지휘관들의 지휘통제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바그다드에 고립된 후세인을 체포하는 순서로 전쟁을 치른다는 구상이었다. 물론 이에 맞선 후세인은 지구전(持久戰)으로서 시민을 불모로 바그다드에서 장기간 버틴다

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계산이었다.

막상 전쟁이 개시되자 바그다드 등의 주요 목표 수백 곳에 크루즈 미사일이 발사되었다.

저항이 심한 중간 거점도시들은 건너뛰면서 빠른 속도로 바그다드로 향했다. 게릴라전, 자살공격, 시속 80km의 사막의 모래바람 등의 장애를 돌파하고 4월2일에는 중부 카르발라에서 공화국 수비대 4개 사단과 교전을 벌였으며, 4일 바그다드 국제공항 완전을 벌였으며, 7일 기갑부대 바그다드 시내 진입 성공 등으로 속전속결을 이루어냈다.

이는 기동성과 속도전 때문에 가능했다. 속전속결은 작전주도권 확보는 물론 정보, 화력, 장비, 작전응용 능력 면에서 절대적인 우세의 유지가 필수적이다.

또한 과거처럼 무겁고 월등한 전투력을 투사하여 신중하고 단계적인 전쟁방식을 채택해온 미군의 전통적인 군사전술 대신에 가볍고 신속 정확한 소수정예 부대 투입과 기동력·순발력을 중시하는 과감한 전쟁방식인 이른바 '럼즈펠드 독트린' (Rumsfeld Doctrine)이 적용되었다.

즉 육군보다는 공군과 해군, 육중한 대부대보다는 가벼운 소부대, 규모보다는 기동성을 강조하는 럼즈펠드 전략 개념이 우수하게 검증되었기 때문에 장차 미군의 부대편성과 전략 개념의 변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 ■ 최적의 부대편성

이라크 전쟁은 걸프전의 연장이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부대운용과 무기체계 면에서 소규모 경량화와 최적의 편성으로 이루어졌다. 참전병력은 1차 걸프전의 40% 수준이었다. 육군의 경우 선봉인 제3·4기계화보병사단, 101공중강습사단, 82공수사단, 제1기갑사단, 제10산악사단, 제1기병사단, 제32육군항공미사일방어사령부 등을 동원했지만 제1·3사단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여단급 이하의 소규모 부대들이었다.

육군과 함께 지상전의 주역을 담당할 해병대도 제1해병원정군(MEF), 제2해병원정여단(MEB), 제15·24해병대원정대(MEU) 등을 배치했다. 해군은 키티호크, 해리 S 트루먼, 시어도어 루스벨트, 컨스텔레이션 등 4척의 항공모함과 이들을 호위·보조하는 순양함, 구축함, 프리깃함, 급유함, 수송함, 상륙강습함 등으로 비교적 강력하게 편성했다.

공군 역시 제28폭격단(B-1B 폭격기), 제49항공단(F-117 스텔스 전투기), 제1항공단(FF-15), 제60항공기동단(KC-10공중급유기), 제55비행단(RC-135 정찰기), 제347구조비행단(HC-130수색구조기), 제16특수전비행단(AC-130 건십기 및 MC-130 컴뱃(세도) 등의 부대를 배치했다.

#### ■ 대규모 특수군 운용과 첨단무기 동원

이라크군의 지휘·통제·통신 및 정보시

설(C3I)에 대한 무력화와 정보수집 및 공중 폭격 유도 등을 위해 1차 걸프전쟁 당시보다 3배 이상인 9000여명의 특수전 병력을 배치했다. 이 중에서 전쟁 개시 9시간 전에 투입되었다는 300여명의 특수작전팀(SOG)의 역할이 돋보였다. 이들은 이미 이라크 내에서 활동하던 소규모 미 특수부대와 중앙정보국(CIA)의 준군사 조직과 함께 통신망 차단, 주요목표 파괴 임무 외에도 이스라엘을 향한 스커드 미사일 공격과 유전 파괴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맡았다. 대규모 특수군과 정규군의 결합 운용은 미국 전쟁사에 새로운 전술로 부각되게 되었다.

이라크 전쟁의 또 다른 특징은 이른바 '디지털전쟁', '스마트전쟁'으로 불릴 만큼 정밀도와 파괴력이 개선된 최첨단 장비가 동원됐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JDAM(Joint Direct Attack Munition)이다. 1997년에 실용화된 JDAM은 스마트 폭탄 즉, 레이저 유도의 Pave Way 계열 및 TV 유도의 GBU-15 등을 대신하는 유도폭탄으로, 'Joint'라는 명칭대로 공군 및 해군(해병대)의 공용무기이다. 최대 특징은 위성 측지항법시스템(GPS)을 유도에 이용하는 것인데, 폭탄은 낙하하면서 GPS로 자신의 3차원 위치를 파악, 투하 전에 입력한 목표의 위치좌표에 공기역학적 날개(fin)로 방향을 잡아 비행한다. 24km 떨어진 목표물을 3m 오차범위 내에서 명중시키는 가공할 만

한 위력을 지니고 있으며, 전천후 공격이 가능한데도 크루즈 미사일보다 50분의 1 수준인 2만 7000달러의 저렴한 가격이어서 앞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무기는 바로 전자폭탄(e-bomb)으로 알려진 '고전력극초단파빔'(HPMs)이다. 이 폭탄은 번개의 100배에 해당하는 20억W의 강력한 전력을 순간적으로 분출하여 반경 330m 내의 지휘·통제용 컴퓨터 등 전자장비를 완전히 파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라크군의 조기 무력화는 이 폭탄에 의한 지휘통제기능 마비에서 비롯됐다고 하겠다. 무인항공기(UAV)도 큰 몫을 했다. 특히 공군과 중앙정보국(CIA)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무인정찰기 '프레데터'의 경우 목표물 상공을 장시간 비행하면서 실시간 정보제공과 함께 장착한 미사일로 원거리에서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상과 같은 특징들은 '미래 전쟁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미군은 전쟁 첫날부터 이른바 '지도부 제거 폭격'(decapitation attack)으로 후세인 대통령 등 이라크정부 지도자들을 겨냥했고 이것은 첩보와 정밀 유도 무기, 특수군에 과거보다 더 의존하는 군사 작전의 전조가 됐다. 이 같은 접근법이 걸프전 이후 이뤄진 군사기술의 극적인 향상과 결합해 미군과 동맹군이 이라크 중심부에 별 저항을 받지 않고 신속히 진격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 IV. 민사작전에 주는 교훈

이라크 자유화 작전은 끝이 났는가? 그리고 이라크 국민들은 자유를 되찾았으며 행복해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도 이라크 자유화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국민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다. 물론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한마디로 말하자면 미군의 민사작전(Civil Affairs Operation) 교리와 군정(Military Government)의 개념 차이에서 찾아야 한다.

미군의 민사교리 핵심은 군사작전을 성공적으로 지원하면서 군사작전 이후 현지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민사행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치안질서, 구호, 선무 심리전 등이 핵심 내용이 된다. 반면에 군정은 일정기간 군이 통치하는 형태로서 2차대전 이후 미국의 점령지 통치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1980년대 미군의 교리가 군정에서 민사작전 개념으로 바뀐 것은 현지 주민들의 행정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라크 전쟁에서 연합군의 전후처리 정책은 군정-과도정부-새정부 구성의 3단계로 합의되었다. 바그다드 함락이 임박해오던 4월7일, 부시 미국 대통령과 블레어 영국총리는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이라크 전후 3단계 처리방안'에 합의했

는데, 미국이 주도하는 군정, 이라크 내 광범한 세력이 참여하는 과도정부 구성, 신헌법 제정과 자유선거를 통한 새 이라크 정부 구성에 합의한 것이다.

이를 좀더 구체화하면 제1단계인 안정화 단계에서는 토미 프랭크스 군정사령관 주도하에 이라크 전역을 군사적으로 장악하고 게릴라 등 저항세력을 제거하며 대량살상무기를 색출하는 것이다. 제2단계인 권력이양 단계는 제이 가너 행정청장 주도하에 후세인 총성파를 제거하고 이라크 재건사업을 진행하며 광범위한 정치세력을 참여시키는 과도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전후처리 정책은 처음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이라크인들의 불만과 불평은 분노와 적대감정으로 비화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반미시위마저 속출하고 있다. 5월7일자USA 투데이는 "미군은 전쟁에서는 손쉽게 승리한 반면, 평화는 얻지 못하고 있다"며 "미군 주둔하에 무정부 상태에 버금가는 지금의 혼란이 계속된다면 이라크인들의 분노는 대량파괴무기보다 무서운 폭"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5월8일자 뉴욕 타임스도 전후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관리 부실로 이라크인들이 전기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미 정부를 정면 공격하고 나섰다. "가너가 이끈 지난 몇 주 동안 유감스러운 점이 많았다. 기름을



사려면 줄을 서서 3일씩 기다려야 하고 식수 공급과 냉장고 작동에 필요한 전기도 수시로 끊긴다. 거리에는 쓰레기들이 썩어가고 콜레라와 설사가 만연하고 있으며 병원도 약품과 진료장비를 약탈당해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이라크의 실상을 전했다. 이어서 “좋은 싫든 현재 미국은 이라크에서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점령국”이라며 “미국은 이라크 국민의 안전과 건강, 기본적인 복지를 돌봐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신임 이라크 재건 최고행정관 폴 브레머는 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신속히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국 미국은 바그다드와 바스라 등 주요 도시에 대민 심리전을 담당하는 특수부대를 파견하여 치안유지, 기간시설 복구, 부상자 치료활동을 폈으며,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미 제354민사여단(중동담당)은 60여명의 이라크인들을 배속시켜 구호활동을 벌이고 무정부 상태인 바그다드의 치안과 질서를 회복시켜 민심을 붙잡는 임무를 수행했으나 역부족이었다.

■ 전후처리정책 미흡

군사력으로 적국을 침공하기 전에 전후처리 정책에 대한 치밀한 계획과 준비는 필수적이다. 이라크 전쟁에 참여한 연합군은 처음에 자신들을 ‘해방군’ (liberating force)으로 부르다가 5월9일 안보리에 제출한 경

제제재 해제 결의안에서는 처음으로 ‘점령군’ (occupying powers)임을 자칭했다.

미국 주도의 이라크 관련 안보리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①점령국과 군정당국은 국제법에 의거 활동 ②군정당국이 지원기금 집행 ③석유수출대금은 지원기금이 관리 ④군정당국 지원 아래 과도정부 구성 ⑤최소 1년간 이라크 재건은 군정당국에 위탁 등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민사정책보다 점령군의 일방적인 군정정책을 채택했음을 분명히 했다. 세계 제2차대전이 끝난 후 1949년에 마련된 제네바 협정에서는 질서회복과 식량공급 등 최소한의 점령국 의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바그다드가 함락된 지 거의 2개월이 되는 시점까지도 여전한 무질서와 취약한 사회기반시설, 복잡한 정치세력 등으로 미국의 이라크 전후 재건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미 워싱턴 렉싱턴 연구소의 로런 톰슨 연구원은 5월19일 “미국의 전후 노력은 대실패에 가깝다”며 “이라크를 재건하려는 분투와 군사적 승리 사이의 대비는 매우 뚜렷하나 질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라는 핵심문제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포스트도 이날 미 국방부가 지난 10여 년 동안 아이티·소말리아·발칸·아프가니스탄 등의 평화유지활동에서 얻은 교훈을 무시해 이라크 정부 붕괴 이후 무질서·약탈의 잠재력을 극도로 평가 절하했다

고 지적했다. 또한 국방부 안팎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적은 수의 병력으로 안전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은 미군이 해방군으로 환영받을 것이라는 폴 울포워츠 국방부 장관의 믿음에서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았으며, 군의 경량화를 표방하는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군 개조 구상과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새 행정책임자로 임명된 폴 브레머가 약탈자에 대한 발포 등 강력한 명령을 선포했지만 범죄행위와 폭력사태는 쉽게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주요 유전시설에선 대규모의 ‘조직범죄형’ 약탈행위로 경제회복의 관건인 원유 생산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미 공병단 대변인은 5월19일 전후 유전시설 피해의 70%가 약탈에 의한 것이라며, 유전시설의 피해규모가 수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결국 가너 인도지원처(ORHA) 처장을 브레머 최고행정관으로 교체한 것도 준비부족과 협조 미흡을 인정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바그다드 지역 책임자 바버라 보다인 전 예멘대사, 공보책임자 마가렌 터트와일러, 산업과 광산을 관장했던 팀 카니 등을 3주 만에 교체한 것은 전후처리와 복구에 부적격자였음을 입증한다.

미군정 당국은 선 민심수습, 후 정권구성의 순차성을 간과한 것 같다.

#### ■ 심리전

심리전(psychological warfare)은 적국의 군인과 민간인을 망라하여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어 아군의 작전을 유리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 개시 이전부터 군사작전의 일부를 공개했으며, 특히 최첨단 무기체계와 막강한 해·공군력의 무력시위를 통해 ‘반드시 이기는 전쟁’임을 대내외에 천명해 왔다.

이라크 전쟁에서 최고 격전이 예상되었던 바그다드 진격도 티그리스강 도강작전에서 양동작전, 기갑부대의 바그다드 진격작전에서 기만전술, 4300만장의 전단을 살포한 심리전 등 다양한 전술들이 동원된 덕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수비대 카림 대령은 “내가 이끌던 부대는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16km 떨어진 다우라에 배치됐으나, 10km 밖에 미군이 나타났다는 소문에 병사들이 모두 옷을 갈아입고 달아나 버렸다”고 밝혔다. 미군의 경계 대상이었던 공화국수비대가 이처럼 맥없이 무너진 데는 미군의 심리전 효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라는 작전명 자체부터 심리전의 일환이었다고 하겠다.

또한 4월9일 바그다드가 함락되자 이라크 국영 TV를 장악한 연합군은 코만도 솔로 C-130 허큘리스 지원기에 설치된 송신기를 이용해 하루 5시간씩 심리전 프로그램을 송출하기도 했다. 이미 사담 후세인 독재정권

은 붕괴되었으며 이제 이라크 국민들은 자유를 되찾았고 민주주의 국가로 재건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주는 내용이었다. 결국 적에게 ‘이길 수 없는 전쟁’임을 확인시켜 줄 수만 있다면 이미 그 전쟁은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독재 군대의 ‘충성의 결의’나 ‘결사항전’ 등은 명확한 패전의 장면 앞에 무용지물이라는 값진 교훈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북한 노동신문(5월15일자)은 미국의 심리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이라크 전쟁은 △이라크 지도부 제거 △이라크군의 전투력 약화 △군대와 주민의 사상적 와해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심리전이 승리의 요인이었다고 평가한 것이다. 즉 “미국은 이라크 지도부를 없애거나 매수, 변절시키는 데 심리전을 적극 이용했다”며 “미 중앙정보국과 군사정보기관들은 전자우편, 휴대용 전화 등 현대적인 통신망을 동원해 이라크 장성들과 바트당 고위 인물과의 접촉에 매달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은 타리크 아지즈 전 이라크 부총리가 망명할 의사가 있다고 허위 선전했고, 이에 격분한 아지즈 부총리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이라크 지도부가 숨어 있는 비밀 방공호를 찾았다가 그를 미행한 미군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또 전쟁에 앞서 이라크인들의 문화와 성격 등에 대한 심리전 전문가들의 연구

를 토대로 사상적 와해를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미국은 이라크 남자들이 사나이로서 모욕당하면 가만있지 않는 성격을 이용해 전선에서 이라크군을 향해 성기능 장애라고 모독하는 선전을 대대적으로 벌였다”며 “이에 격분한 이라크 병사들이 참호에서 뛰쳐나와 무모하게 맞서다가 미군의 총격에 쓰러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전쟁은 △미국의 심리전에 맞서면 신념이 흔들리고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길을 걷게 되고 △심리전과 사상적 와해에 단호한 혁명적 공세로 대처하지 않으면 어떤 대결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 ■ 행정 및 치안

이라크 전쟁에서 전시 민심의 향배와 무법·무질서의 무제한성을 또다시 입증했다.

24년 독재정권이 붕괴되자 약탈, 도난, 보복이 극치에 달했다. 사담 후세인 정권 몰락 후 계속된 약탈행위로 이라크 은행들에서 약 4억 달러 규모의 외화가 도난당했으며 없어진 외화는 주로 미국 달러화와 유로화, 파운드화 등이었다.

또한 미 군정당국은 6월 1~14일을 불법 무기 자진 반납기간으로 정하고 6월15일 이후에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무기 소지자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군정당국은 폴 브레머 이라크 최고행정관 명

의로 발표된 ‘국가명령’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불법 무기를 반납하려는 사람들은 ‘총알을 빼 분해한 무기를 연합군이 배포한 투명 플라스틱 봉지에 담아’ 전국 각지에 설치된 수거소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불법 무기 수거소는 경찰서 등에 설치되며 연합군과 이라크인들이 공동으로 오후 6시 이전의 낮 시간에 운영하도록 했다.

한편 미군은 이라크 바트당원 20만명에 게 자수명령을 하달했다. 이라크 전후 재건 사업을 벌이고 있는 미군은 5월22일 사담 후세인 정권 아래서 집권당으로 온갖 범죄적 행위를 자행한 바트당의 전체당원 약 20만명에 대해 자수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앞서 브레머 이라크 최고 행정관은 바트 당원 중 1~4등급 당원 약 3만 5000명에 대해 공직 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 ■ 문화재

한편 미군이 바그다드에 입성한 직후, 약탈자들이 바그다드 소재 국립고고학박물관에 침입하여 세계 최고의 문명이 남긴 수천점의 값진 고대유물들을 빼돌리거나 파괴했다. 이들은 또한 국립문서보관소도 뚫고 들어갔으며 바그다드 시내 국립도서관에 방화하기도 했고 북부 모술의 한 박물관도 약탈했다. 미국은 첨단군사장비를 동원하고 신속한 기동으로 바그다드를 함락했으나 현지 주민들은 일시에 범죄자와 폭도로 돌변하는 모

습을 당분간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다.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이라크 문화유산 피해실태 조사단이 4일간의 조사를 마친 뒤인 5월20일에 밝힌 바에 의하면 이라크의 문화 유산들이 전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조사단장인 무니르 부체나키 사무총장보는 이날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방문으로 이라크 문화유산의 엄청난 피해를 확인했다. 그것은 정말로 재앙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장서 100만권을 보유하고 있던 국립도서관과 국가문서보관소에서 최악의 상황을 보았다. 잿더미만 남아 있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한편 미국 조사단은 바그다드 박물관의 많은 유물들이 바그다드 함락과 함께 약탈자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이라크 중앙은행 지하 저장소와 대피소 등으로 옮겨져 약탈 피해를 모면했다고 밝혔다. 조사책임자 매튜 보그다노스 미군 대령은 “박물관 소장 유물대장이 없고, 기록보관도 엉망이어서 박물관 직원들이 작성한 불완전한 명세표들에 의존해 분실 등 피해실태를 추정했다”고 털어놨다. 특히 “주요 유물들의 경우 전쟁 전에 숨긴 장소들을 추적했으나 이라크 현지 관리인들이 새 이라크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이 유물들을 넘겨주기를 거부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 V. 결론

전쟁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종적인 수단으로 동원된다. 전쟁의 정치적 목적은 국가이익 추구에 있는 것이지 정당성과 도덕성이 중요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군사적 승리가 반드시 정치적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서 현지 주민들의 민심을 사로잡는 민사군정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한국군의 민사작전 임무는 군사작전 성공을 지원하고 한국 정부의 북한지역에서의 자유화 행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한국군의 전시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ntrol)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되어있는 상황에서 작전계획상의 협조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인 연관성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으므로 고도의 전략적 사고가 요망되는 시점이다.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 목표는 의심할 여지없이 미국 중심의 단일 패권 추구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는 부시 독트린으로 대변되듯이 반테러전쟁과 대량 파괴무기(WMD) 확산방지에 두고 있으며 미국의 군사전략은 이라크 전쟁에서 검증된 바 있는 럼즈펠드 독트린, 즉 '신 군사전략 개념'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

한편 북한의 입장에서는 매우 나쁜 시기에 아주 어려운 상대와 무서운 핵무기 개발 카드를 내세워 위협을 통한 협상전술을 구

사하고 있으나, 이라크 전쟁의 조기 종전과 미국의 압도적인 승리를 보면서 협상의 태도를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실제로 4월9일에 바그다드가 함락되자 북한은 3일 후인 12일에 회담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북·미대화를 제의해 베이징 3자 회담이 성사되었다.

또한 미국의 이라크전쟁 이후 북핵문제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5·15 한·미공동성명이 발표되어 한·미 공조의 공고성을 재확인했다. 물론 북핵 불용과 평화적 해결원칙에는 합의했으나 '추가적 조치' (further steps)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즉 북한과 핵협상에서 타협에 실패하고 북한이 금지선(red line)을 넘었을 때는 경제제재와 군사제재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사정책은 어떠한 위협에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라크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한국군의 민사정책상 교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미국 부시 행정부는 9·11테러로 실추된 국가이미지 제고와 반테러 전쟁의 명분이라면 전세계의 반전·반미여론이나 유엔결의 여부와 무관하게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이라크 전쟁에서 보여주었다. 그리고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세계 어느 나라와 전쟁을 치르더라도 완승할 수 있는 군사력과 국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만일 핵문제로 위협을 고조시킬 경우에는 선제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둘째, 군사적 승리를 정치적 승리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미국은 1년간의 전쟁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미군의 입성을 환영하던 주민들이 3주 만에 반미로 돌아섰다. 밤마다 울리는 총성과 수많은 실업인 때문에 후세인 동상 받침대에 ‘이제다 끝났으니 돌아가라’ (All Done Go Home), ‘안전, 전기, 수도, 생필품, 직장과 직업도 없는 굶어죽을 자유란 말인가’ 등의 낙서가 등장했다는 것은 철저한 민사적 대비의 중요성을 재인식시켜 주었고 군사적 승리만으로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셋째,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미 양국은 북한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군정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조율할 필요가 있다. 그때 가서 민사와 군정 사이에 혼란이 생겨서도 안되고 군사 작전권과

민사작전권 사이에 간극이 생겨서도 안 된다. 또한 전시 작전지휘권의 한국군 환수를 논의하는 마당에서 독자적인 민사작전능력 향상 노력을 배가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성 있는 민사교리의 발전과 민사요원의 양성 및 확보, 물자 및 장비의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넷째, 치안·행정면에서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죄수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고 경찰 및 치안방책을 강구하여 약탈, 보복살인, 은행절도, 도난 등에 대비해야 한다. 대량의 전재민을 구호할 수 있는 생필품, 간이시설 등의 물자동원계획을 발전시켜야 하며, 주요 산업시설과 위험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군사작전 부대와 사전에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요 문화재가 도난·약탈당하지 않도록 조기에 접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지주민의 입장에서 제반 문제점들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결국 이라크 전쟁은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에 의해 치러졌고 그것도 압도적인 화력과 첨단무기체계에 맥없이 무너졌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와 남북한 모두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남겼다. 따라서 군사작전 승리를 민사작전 성공으로 이끌어내는 정책발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